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pp.165~19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2

한·미·일 삼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비교*

류 성 민
한신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한·미·일 삼국의 종교교육이 각국의 종교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그 정책이 종교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지에 따라 세 나라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종교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종교정책도 이 두 종교를 중심으로 입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종교교육에서도 두 종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상황이며, 주로 종파 혹은 교파간의 형평과 종교의 자유에 치중된 종교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것도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종교교육도 그러한 법적 판단에 의거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을 엄격히 구분한 다음 공교육에서의 특정 교파나 종파의 편중을 배제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대표적 종교이나 종교단체(주로 종교법인)를 기본으로 활동하며 종교정책도 종교법인법에 의한 종교단체의 관리와 감독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종교교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교육과 공교육의 분리를 근간으로 공교육에서의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의 금지를 기초로 종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세 국가는 정교의 분리와 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나 교파에 치중된 공교육에서의 교육 배제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교육와 공교육의 구분이 모호한 현실에서 종교교육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은 공교육에서의 특정 종파나 교파에 편중된 종교교육의 범위와 한계 등에서 종교교육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공교육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교육계와 정계 모두에서 두루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들에서 종교현실의 차이에 따라 종교정책의 강조가 다르며, 종교교육에서 야기되는 주요 문제들도 다르나, 세 국가에서 모두 종교에 대한 교육(종교학교육 혹은 종교문화교육, 종교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종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러한 교육이 적극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 주제어 : 종교교육, 종교정책, 종교현실, 사교육과 공교육, 종교에 대한 교육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048)

Ⅰ. 서 론

오늘날 종교교육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사안이 되어 있다. 물론 종교교육만이 교육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몇 가지 이유에서 종교교육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과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 자체가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으나 근대에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유독 특이한 문제들이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다. 종교교육 자체가 종교와 교육의 분리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정교의 분리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이른바 세속국가를 자처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종교교육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지는 공교육 체제의 도입은 그러한 문제를 가중시켰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 종교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다종교 상황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통적인 종교교육도 문젯거리로 등장했다. 종교교육의 내용마저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전형적인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교육이 첨예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고, 점차 종교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마다 종교의 현실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상호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교의 틀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다소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헌법적으로 정교의 분리를 보장하고 있고 관련 법률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도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세 나라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고, 내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으로서의 종교교육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교육들의 내용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며 동시에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비교의 틀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종교교육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세 나라의 종교현실에 대한 비교를 할 것이다. 실제로 종교현실 자체가 종교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종교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현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으로 종교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국의 종교정책이다. 한 국가의 종교정책의 특징이 종교교육에 반영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현실과 종교정책에 대한 비교는 종교교육의 비교를 위한 정황(context)을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며, 종교교육 자체에 대한 비교는 그 제

〈표 1〉 한·중·일 삼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에 대한 비교 항목

구분	비교 항목
종교현실	종교별인구, 종교 및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등
종교정책	종교정책의 기조와 관련 법률, 종교정책 국가기관과 그 활동 등
종교교육	제도적 측면: 관련 법률, 학교체계, 교과과정 체계 등
	내용적 측면: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교과서 및 교과내용 등
종교문제의 해결방식	정교분리의 문제, 신앙의 자유문제 등

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도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학교체제 및 교과과정 체제를 비교할 것이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과서 및 교과내용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각국의 종교교육관련 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비교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의 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1)]

이러한 비교의 틀은 종교현실이 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한 과정이 종교교육에 반영되고 있으며, 종교교육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도 종교현실과 종교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종교현실과 종교정책, 종교교육 및 종교교육상의 문제해결이 유기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의 틀인 것이다.

비교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세 나라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국의 종교교육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에 대한 제언도 가능하겠지만 종교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이 글의 목적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한·미·일 삼국의 종교현실 비교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종교관련 센서스의 시기와 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종교 인구를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비슷한 기준에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세 국가의 종교 인구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일 삼국의 종교 인구분포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종교인구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종

1) 이러한 비교의 틀을 작업가설적인 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완되고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2〉 한·미·일 삼국의 종교현황

국가	종교별인구(총인구대비 비율, %)			비고
한국	불교	11,040,000	(23.9)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 불교 22.8%, 개신교 18.3%, 천주교 10.9%로 나타났음.
	개신교	9,370,000	(20.2)	
	천주교	3,160,000	(6.9)	
	유교	230,000	(0.5)	
	원불교	90,000	(0.2)	
	기타	290,000	(0.6)	
	비종교 인구	23,490,000	(50.9)	
미국	기독교	2 42,011,000	(82.4)	2005년도 중반 기준으로는 개신교 20.4%, 천주교 22.0%, 독립기독교 26.3%로 되어 있음.
	- 개신교	66,287,000	(22.6)	
	- 천주교	59,542,000	(20.3)	
	- 독립기독교	80,639,000	(27.6)	
	- 동방정교회	5,915,000	(2.0)	
	- 성공회	2,464,000	(0.8)	
	유대교	5,771,000	(2.0)	
	이슬람교	4,242,000	(1.4)	
	불교	2,5150,00	(0.9)	
	힌두교	1,059,000	(0.4)	
일본	신도	118,270,000	(92.6)	종교단체 가입자 수 기준으로, 불교와 신도의 종교단체들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인구가 총인구보다 많게 계상됨.
	불교	88,490,000	(69.3)	
	기독교	1,470,000	(1.2)	
	기타	10,250,000	(8.0)	

* 출처: Britannica 2006 Book of the Year(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2006), pp. 768-769에서 재구성. 총인구는 2004년, 종교 인구는 2001년 기준임.

교 인구도 종교 인구와 거의 같다. 비록 자기 확인 방식에 의한 인구센서스 결과이기는 하나 대체로 한국의 종교 인구와 비종교 인구는 비슷한 비율로 양분되어 있고, 종교 인구는 불교와 기독교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분포는 종교정책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몇 가지 단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만이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나 국장(國葬)을 거행할 때 불교식과 개신교식 및 천주교식만이 차례로 포함되는 것, 혹은 불교와 개신교 및 천주교에서만 오랫동안 군종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2)]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불교와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종교계 학교(종

2) 불교와 개신교 및 천주교 이외에 처음으로 2006년 7월에 원불교 군종장교(1명, 대위)제도가 생겨났다.

〈표 3〉 한국의 종교계 학교 현황[3]

종교 \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계	전체 학교수 대비 비율(%)
불 교	14	13	-	3	30	6.5
천주교	27	33	1	10	71	15.3
개신교	120	168	17	37	342	73.7
원불교	3	4	-	2	9	1.9
통일교	2	2	-	1	4	0.9
대순진리교	-	6	-	1	7	1.5
계	166	226	18	54	464	100.0

립학교)의 수에 있어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종립학교에서 두 종교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나 되고, 특히 개신교 학교 비율이 전체의 73.7%가 된다.

이러한 기독교와 불교에 편중된 학교 수가 일정 정도 한국의 종교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립학교들이 종교교육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등학교 교양과목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종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도 모두 종립학교들이며, 교과서들도 대부분 종교단체들에서 펴낸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종교교육 현실은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립학교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문제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종교 인구는 앞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 인구가 8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가 유대교이나 전체 인구의 불과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종교정책은 기독교의 절대적 우위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독교 성서 위에 손을 놓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이나 모든 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넣은 것, 혹은 미국 헌법이나 주 헌법들에서 "하나님"(God)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등은 미국의 기독교적 배경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에 상술하게 될 것이지만 미국의 종교정책은 전반적인 기독교적 현실을 감안하여 종교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독교 내의 종파 혹은 교단들 사이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마저 한 종파 내지는 한 교파처럼 취급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종교 인구에 대한 통계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는 종파와 교파별로 구분하고 있으

3) 전라북도 교육청 편, 『개정사립학교법 해설집』(전라북도 교육청, 2005), 29쪽. 이 표는 2004. 4.1 현재이며, 초등학교(17개: 불교 1개, 개신교 10개, 천주교 6개)는 제외했음.

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종교별로 다루고 있다.

종교교육과 관련된 미국 종교정책은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판례가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사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미국교육현실에서 사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전적으로 자유롭다.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아무런 규제도 없다. 그러나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무수한 판례들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종파적 혹은 교파적 편견이 없는 세속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종교 간 형평과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종파적이거나 교파적인 편향이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도와 불교의 인구만 하더라도 일본 총인구의 1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두 종교의 종교단체들에 모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며, 그만큼 이 두 종교가 일본을 대표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인구나 종교현황의 파악이 종교단체(주로 법인)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종교 인구는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이며, 종교현황은 종교단체의 현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종교를 믿는 것보다는 어떤 종교단체에 등록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종교단체들은 무려 18만개가 넘는다.[4] 그러한 종교단체들이 크게는 신도계, 불교계, 기독교계. 제교(諸教)로 구분되고, 각 계통을 세부적으로 다시 구분되고 있지만, 각각의 종교법인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교법인수만큼의 종교가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따라서 일본의 종교정책은 종교법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종교법인법은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곧 일본의 종교정책은 종교법인에 대한 정책인 것이다.[5]

일본의 종교교육에 관한 정책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철저히 구분하고,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배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사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을 허용하지만 종교계 학교가 전체 학교의 2%에 불과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단지 일본 종교교육정책이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법령[6]을 통

4) 文化廳文化部宗務課 편, 『宗教年鑑』, 平成 15年版(文化廳, 2004), 1쪽에서는 2003년도 단립종교법인(신사, 사찰, 교회 등 개별 종교단체) 수를 182,223개로, 포괄종교단체 수를 485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종교법인 수(2005년 말 현재 398개)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일본에서는 종교관련 국가 공휴일이 하나도 없다. 크리스마스나 부처님오신날도 국가지정 공휴일이 아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종교정책이 종교보다는 종교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6) 헌법 제20조와 제89조, 교육기본법 제9조, 사회교육법 제23조 등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나 종교활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종교현실은 종교정책과 종교교육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와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현실이 종교정책에 영향을 주어 그 두 종교 중심의 종교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종교교육도 역시 두 종교에서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모호한 한국의 현실에서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나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반발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교육이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종교의 현실은 종교정책이나 종교교육에 반영되고 있는데, 종파나 교파별로 종교를 인식하는 미국과 종교단체로서 종교를 인식하는 일본의 종교정책이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종파와 교파 혹은 종교단체들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현실에서 종교교육의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엄격한 분리라는 기준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미국의 대법원 판례와 일본의 종교법인법 등 법적 규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필히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종교교육이 한국과 미국 및 일본에서 여전히 특정 종교에 대한 혹은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교육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문제들에서도 종교교육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종교의(of) 교육과 종교에 대한(about) 교육을 구분하고 후자는 공교육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 나라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게 종교교육을 인식할 경우 교육과정과 내용이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정책과 종교현실에 대한 이해도 종교에 관한 교육의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그에 앞서 세 국가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국의 그것들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한다.

Ⅲ. 한·미·일 삼국의 종교정책 비교

각 국가의 종교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일차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헌법상 종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는 한·미·일 삼국의 헌법에서 종교관련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교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헌법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교의 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간단히 명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헌법은 특히 공직(公職)을 맡을 자격 요건에서의 종교적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국가에 의한 종교활동 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점에서 약간의

〈표 4〉 한미일 삼국의 헌법의 종교관련 조항 비교

국가	종교관련 조문 내용	비고
한국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
미국	제6조 【3항】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주의회의원, 합중국 및 각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수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미합중국헌법 (1787년 제정, 1791년 수정 비준)
일본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제20조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않는다.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7장 재정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日本國憲法 (1946년 공포)

강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미·일의 종교정책 상 차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헌법 이외의 법률들에서 찾을 수 있다. 법에 의한 종교정책 집행을 가장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1951년에 제정하여 1995년까지 11차례의 개정을 한 '종교법인법'을 통해 국가의 종교정책을 펴고 있다. '종교법인법'이 목적이 "종교단체가 예배시설 및 그 밖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운용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 및 사업을 운영하는 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법률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제1조의 ①)인데,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필히 종교법인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제12조) 관할청이 그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제43조 ②항의 4) 사실상 국가가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다. 특히 이 법의 보칙(제9장)과 벌칙(제10장)은 관할청이 종교법인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허가된 공익사업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종교법인법은 없지만, 여러 법률을 통해 사실상 종교법인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의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문화관광부 종무실)에서도 종교법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7] 문화관광부는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종교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와 취소, 해산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과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는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혹은 종교로서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군소 종교들이며, 세제상의 혜택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교단체들 혹은 일본식의 단위종교법인(교회와 사찰, 신사 등)은 대부분 법인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있다.[8] 결국 한국은 국가적 지원과 혜택이라는 수단을 갖고 종단이나 교단 혹은 일부 군소 종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정책을 펴는 것이며, 그러한 종교정책에서는 규모가 크고 신자수가 많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단체들(주로 개신교와 불교 및 천주교의 종교단체들)이 그 지원과 혜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헌법뿐만 아니라 주 헌법들에서도 대체로 네 부분에서 종교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곧 전문(前文)에서 "전능하신 하나님"(Almighty God)의 호의와 지도를 기원하거나 축복을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주 헌법에 포함되고, 둘째로 연방 헌법의 국교금지와 종교의 자유 및 종교에 의거한 차별금지 조문들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관련 면세와 감세 조항 등이다. 주마다 다소 내용이 다르지만 전문은 미국의 기독교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 헌법의 기본적

---

7)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관광부령)의거 문화관광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중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을 종교법인으로 규정, 종교법인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8) 문화관광부에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종교단체들은 일본의 포괄종교법인이나 단립법인들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어떤 구속력 있는 문구는 아니다. 그리고 국교금지와 신앙의 자유 및 차별금지 조항은 연방헌법의 내용을 주의 실정에 따라 구체화한 것들이다. 이러한 주 헌법의 조항과 연방정부 헌법의 조항 사이의 불일치 혹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판례도 많은 것이 종교교육과 관련된 것들이다.[9] 감세 혹은 면세와 관련된 조항들은 전적으로(exclusively)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부에 대한 것으로, 전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감세나 면세의 기준이나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한·미·일 삼국의 종교정책을 비교해 볼 때, 세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정교의 분리와 종교의 자유 및 종교 간 형평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종교정책은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통해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의 종교정책은 명문화된 법적 규정을 통해 종교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상황을 감독하고 감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과 주 헌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정책을 펴기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여론에 방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정부 부처 내에 종교관련 부서의 유무와 활동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세 나라 중 그 규모나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크고 적극적인 종교관련 정부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장관의 직속 심의회로 '종교법인심의회'를 두어 종교법인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 문화부에 종무과 종교법인실(인증계, 법인계, 법규계)과 종무과(서무계, 조사계) 등을 두어 15-20명 정도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종교관련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명하여 둠으로써 전국적인 종교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부서들의 주요 업무는 종교법인법에 의거하여 종교법인의 인증업무, 종교법인의 관리 운영 지도, 종교관련 자료의 수집 및 종교법인 심의회 운영 등이다.[10] 일본의 종교단체들이 대부분 종교법인화되어 있고 이러한 부서들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감독과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어떤 단체가 종교단체인지를 국가 기구가 검증하고 그 운영마저도 감독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활동에 대한 의무적 보고를 통해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문화관광부에 문화부 종무과를 두고 종교관련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1968년에 중앙부서의 과(課)단위로 독립되고 1982년에 실(室)로 승격되어 여러 차례

9) 종교교육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10) 文化廳 編, 『我が國の文化行政』(日本 東京: 文化廳長官官房政策課, 2005), 63쪽.

그 규모의 변화가 있었지만, 2006년 말 현재 종무실장 1인과 10명의 직원이 법인설립 허가 및 활동지원, 종교 실태 파악, 종무정책 수립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금전적 지원이 대부분인 종교계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11] 물론 그러한 지원이 명목상으로는 특정 종교의 고유한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 종교간 화합 및 종교계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지만 종교계의 활동 자체가 종교고유의 활동과 대 사회적 문화 활동 사이의 경계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고유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귀착되기 십상이다.[12] 더군다나 그러한 지원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근'의 성격도 갖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부처 내에 국내 종교관련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종교관련 부서가 없다.[13]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국가에서 종교법인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를 일종이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로 보기 때문에 법에 어떤 형태의 종교조직이나 행태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거나 인증하지 않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14] 물론 주의 법률에 따라 종교단체가 법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종교법인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 정부에 법인의 업무나 수지 등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다. 다만 종교법인의 수입 및 고정자산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 사업(수익사업이든 비수익사업이든 모두)에 대해 세법에 따른 세무보고는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관련 문제는 헌법과 주 헌법 및 종교관련 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기준이 되며, 판례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례이다.[15] 말하자면 헌법과 주 헌법 및 종교관련 법령과 대법원이 판례가 사실상의 미국 종교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미국정부의 종교정책은 오히려 대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곧 1998년의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88)에 의해 외교관계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의 보장 여부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16]

---

11) 종무실 예산의 90% 정도가 종교문화 활동지원, 전통사찰보존지원, 종교문화시설지원 등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or.kr) 참조.

12) 예컨대 2005년도 지원사업 중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오지 및 파송예정선교사 대상 한국문화소개프로그램'(8,000만원 국고 지원)이나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운영비 10억원, 운영시설개선 15억원 등 25억 지원) 등은 다분히 특정 종교의 고유 종교적 사업이란 측면이 강하다.

13) 미국무부 산하의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에 The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있으나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른 국제종교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14)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편, 『해외 각국의 종교현황과 제도연구』(서울: 문화관광부, 1999), 94쪽.

15) 예컨대 1988년의 판례(Employment Div. v. Smith, 485 U.S. 660)에 따라 1993년에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가 제정된 것이다.

16) 이 법에 의해 매년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The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요컨대 한국의 종교정책은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매개로 한 종교계의 활동을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일본은 법에 의한 감시와 감독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대내적 조율과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한 대외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각국의 종교교육에도 반영되고 있는 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Ⅳ. 한·미·일 삼국의 종교교육 비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민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하에 공교육이 보편화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고 법에 따라 교육체계와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기관들이 있다. 반면 종교는 정교의 분리와 신앙의 자유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에 의해 전적으로 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간섭과 종교의 국가에 대한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교육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의 경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갖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미·일 삼국에서 기본적으로는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구분하고, 전자를 공교육의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한·미·일 삼국에서 모두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이 세 국가에 모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특정종교를 위한 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를 공립학교로, 그 외의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설립한 학교를 사립학교로 지칭,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 주체의 측면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한 구분이 모호해진다. 우선 초·중등학교들의 교과과정에서는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거의 없다. 공립과 사립이 동일한 교과서(특히 국정 및 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교과과정과 이수구분이 거의 같다. 곧 사립학교들이 독자적인 교과과정과 이수구분을 만들고 독자적으로 선정하거나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들도 관할 교육청(초중등학교의 경우)과 교육인적자원부(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의 지도를 받고, 각종 명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발간하고 있으며, 종교자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국가들을 특별 관심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CPCs])로 규정,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06년의 특별 관심국가들로는 미얀마, 중국, 북한, 이란, 수단, 에르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이다.

〈표 5〉 한·중·일 삼국의 종교교육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조문내용	비고
한국(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8. 3. 1 시행, 2005. 11. 8 전문 개정
미국(주법)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9조 8항 공적인 자금이 어떤 종파적 혹은 교파적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공립학교 공무원들의 전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 주의 어떤 공립학교에서도 어떤 종파적 혹은 교파적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주 헌법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임.
일본(교육기본법)	종교 교육 제15조 ① 종교에 관한 관용의 태도,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 및 종교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지위는, 교육상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는, 특정의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 그 외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1947. 5.3 시행 2006.12.15 전문개정

있으며, 사실상의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다.[17]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공교육체제에 합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립학교들이 전체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과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의 비율을 정리한 <표 6>을 보면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과,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가 전체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학교 수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학교 22.5%, 고등학교 44.8%, 전문대학 91.1%, 대학교 85%가 되고, 사립학교는 물론 전체 학교 수에서 종교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학교 5.7%, 고등학교 10.8%, 전문대학 11.4%, 대학교

17)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자립형 사립학교'이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체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답습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표 6〉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전체	종립	전체	종립	전체	종립	전체	종립
전체	학교 수(개)	2,935	166	2,095	226	158	18	173	54
	비율(%)	100.0	5.7	100.0	10.8	100.0	11.4	100.0	31.2
사립	학교 수(개)	659	166	939	226	144	18	147	54
	비율(%)	100.0	25.2	100.0	24.1	100.0	12.5	100.0	36.7
전체 학교 수 대비 사립학교 수 비율(%)		22.4		44.8		91.1		85.0	

* 전체학교수는 『2005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확인.

** 종립학교 수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http://www.kfcs.or.kr), 불교교육연합회,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http://www.cbck.or.kr) 회원학교수와 대한불교진흥원 편 『한국불교총람』(대한불교진흥원, 1998)을 통해 확인한 것임. 기타 종교들에 대해서는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종교연감』(1994-1998)에서 확인.

31.2%나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을 배제한 공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립학교에서 다시 종교계 학교를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무시험 전형과 내신 성적 반영, 학군제 등 국가의 교육체계와 정책에 종교계 사립학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계 학교들에서만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중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부분 공교육체제에 편입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무시험 전형과 학군제, 상급학교 진학에서의 내신제 등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사립의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18], 종교의식(예배와 미사, 법회 등)이 정규시간에 편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종교과목의 교과서들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특정 종교에 관한 것이며, 특정 종교의 경전을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9] 2004년도에 크게 사

18)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양 선택과목 중 '종교'를 택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107개교에 이르고 있다. 거의 대다수 일반계 종립학교들에서 종교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19) 종립학교들에서의 종교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류성민,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현대사회연구소, 1994),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정신문화연구원, 1990),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11-127쪽, 고병철, "한국 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종립 고등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09-138, 김귀성 외, "기획논문: 종립학교, 종교교육

회문제화 되었던 한 기독교계 고등학생의 1인 시위와 단식 투쟁은 종립학교들의 종교교육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종교교육이 사실상의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 일관되고 있는 이러한 종교교육의 현실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은 원론적 입장이 표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20] 앞서 언급한 무시험제도와 학군제, 내신제 등으로 인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자 당시 교육당국은 '종교'를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21]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제4차 교육과정, 1981-1987)했으나 교과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대학입시와는 관련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종립학교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으며, 종립학교에서 종전이 특정종교 관련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승인하는 조치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부터는 종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특정 종교에 관한 것뿐이었고,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과정이 제시되고 특정 종교에 관한 것은 말미에 간략히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에 따른 교과서나 교육내용은 종전과 거의 다름없는 특정 종교에 대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종교'과목을 교양 선택과목을 채택할 경우 다른 선택과목을 함께 개설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2개의 교양 선택과목을 택하는 것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 이외에는 '종교'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종립학교에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 중학교는 2001년,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적용)에서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종교교육이 "온전한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과목의 일환으로 정립시키려는 목적을 제시했으나, "신앙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선 종단학교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함으로써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던 종전의 교육과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22] 그 결과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8개 영역 중 하나로 했고, 그 특정 종교의 경전과 교리, 역사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물론 나머지 7개 영역

의 방향: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21-242) 등을 참조.

20)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도자료」(2005. 1.21)를 통해 밝히 바에 따르면, 2005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서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보장되는 종교과목 편성·운영과 종교활동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토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교계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 중에 종교의식을 거행하여 학생들의 의무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과목 이외의 선택과목을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종교과목을 운영하는 114개의 학교 중 복수과목 편성학교는 88개이다.).

21) 종교 이외에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과목이 교양 선택과목이었다.

22) 유위준·정지홍·김융성, "종교", 교육부 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5. 교양』(교육인적자원부, 2000), 124쪽.

이 모두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지향한 것이고, '종교' 과목을 선택한 학교들에서 그 교과 내용대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교양과목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의 종교 과목 교과서들이 특정 종교를 다룬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의 수업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내용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한국의 종교교육은 공교육 체제에의 사교육 편입,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 편중되어 있는 교과서과 교육과정, 종교계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종교교육에 대한 방향만 제시할 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교육정책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사립학교는 교과과정이나 교과서의 선택, 학교의 운영 등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경전에 대한 교육, 의무적 종교의식 참여 등 종교의 교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도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일반적인 과목과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정규 교과과정에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헌법이나 수정헌법 및 주 헌법과 관련 법률들에 의해 종교교육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공립학교들이다. 현재의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공립학교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 조항을 충족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instruction about religion)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23] 첫째, 그 본질과 의도와 목적(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이 세속적이어야 한다. 세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교든 어떤 특정 종교이든 아니면 무(無)종교이든 간에 종교를 증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 일차적 결과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세속적이어야 한다. 곧 종교나 무종교를 직접적으로 고양하거나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종교에 관한 학습과정을 제시하는 방법은 국가와 어떤 종교단체 사이의 지나친 연루를 피해야 한다.(예들 들면, 그러한 과정들을 가르치기 위해 목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종교단체들에서도 수긍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95년 4월에 미국의 36개 주요 종교단체와 이념 및 정치조직들이 현행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공립학교들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24] 그 내용은 오랫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온 것이며 미국의 종교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3) Dale Cannon, "Public Education Religion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LV: 3(Fall 1987), pp.569-588.

24) 이 합의문의 제목은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A Joint Statement of Current Law"로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아직도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The RJ&L Religious Liberty Archive: A Service of the Religious Institutions Group at Rothgerber John & Lyons LLP(http://churchstatelaw.com/treatises/3_3.asp.).

1) 학생들의 기도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을 이루어 기도하거나 종교적 입장을 발표할 권리를 갖는다. 사적인 종교적 발언이나 성서 혹은 다른 경전을 읽는 것, 식사기도, 시험 전의기도 등이 모두 허용되어야 하고, 매우 활동적인 학교활동을 하고 있는 중(예를 들면 교사가 뭔가 시키기 위해 호명을 할 때 기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이 아니라면 교실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졸업식 기도와 종교적인 학위수여식

학교 당국자들은 졸업식에 기도 순서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종교적인 학위수여식을 거행해서도 안 된다. 학교 시설물을 그러한 의식을 하는데 대여할 때에는 다른 비종교적 집단들에게 제공하는 똑같은 조건으로 대여해야 하며, 그러한 의식을 학교에 공식적으로 후원해서는 안 된다.(졸업식에서 순서와 관계없이 학생들에 의해 시도되는 기도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

3) 종교적 활동에의 공식적 참여와 격려

교사들과 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이나 반종교 활동을 고무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과 더불어 그러한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사적으로 교사휴게실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종교에 대한 교수

종교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듯이, "비교종교학이나 종교사 및 그러한 과목들과 문명의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공부 없이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종교사, 비교종교학, 문학으로서의 성서(혹은 다른 경전들)와 같은 과목은 허용된다. 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무방하다.

비교종교학이나 사회과목에서 종교적인 설명(진화론과 같은)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학과목에서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비판이나 증거만을 가르쳐야 하며, 종교적인 비판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보편적 것인 양 가르쳐서는 안 된다. 종교들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종교적 신념을 과학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도 안 된다.

5) 숙제와 종교

학생들은 보고서(report)나 숙제, 예술작품 등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은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이 단지 종교적인 상징들을 포함하거나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하여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숙제는 오직 학문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종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종교적 주장에 의한 설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사이의 조심스러운 조정이 필요하다.

6) 종교적 문건의 배포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교적 문헌을 배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 종교적 문건 혹은 반종교적 문건을 배부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할 수는 있다. 다만 모든 다른 공동체의 그룹들이 공립학교의 공통의 영역에 그러한 문헌들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한다면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다.

7) 특별활동

방과 전이나 후에 있는 이벤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교직원들이 그러한 이벤트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종교적 설득 대 종교적 괴롭힘

이 양자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것이다. 정치적인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동료 학생에게 말하고 설득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t 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괴롭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학생에 다른 학생에게 교회가 가자고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가자고 초대를 하는 것은 종교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학생의 연령과 주변 상황에 의해 그 사이의 경계가 그어질 수 있을 것이다.

9) 평등한 사용권

만일 한 학교에서 비교과 클럽에게 방과 시간 외에 만나는 것에 대해 학교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종교 클럽에도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평등접근법(the Equal Access)의 규정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러한 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으며, 외부인이 정규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도록 할 수는 없다.

10) 종교 축일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축일들에 대해 가르칠 수 있으며, 그 휴일의 세속적 측면을 축하할 수도 있고, 그것들의 종교적 측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축일들을 종교적 사건으로 준수할 수는 없다.

11) 종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수업의 면제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개개의 학생들이나 그 부모에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수업에 대해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만일 특정한 수업들이 학생의 자유로운 종교적 실행에 부담이 된다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학생에게 그 수업을 면제하여주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12) 교수의 가치

학교에서는 성적인 절제와 피임을 가르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교육정책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종교적 신조로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종교가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것들 가르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여기게 하지는 않는다.

13) 학생들의 의상

종교적 문구를 써넣은 티셔츠와 그와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유대교의 기도나 의식에서 남자들이 두르는 작은 두건(yarmulke)과 머리 스카프와 같은 종교적인 의상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이 종교적인 근거에서 정중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체육복을 입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14) 교외에서 허용되는 개인 활동

학교는 교외에서의 종교 교육에 학생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학교가 참여를 독려하거나 저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업이 있는 날 교내에서 외부인들이 종교교육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합의는 공립학교들에서 종교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지침서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중요 교단들과 종교단체들이 공동으로 펴낸 지침서[25]에서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국교의 금지와 신앙의 자유를 표명한 수정 헌법 제 1조의 정신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하게 종교에 대해 (study **about** religion)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26]

---

25) 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Nashville, TN: First Amendment Center, 1999) 참조. 이 지침서에 배서한 조직들로는, 미국 학교 행정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미국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미국 유대교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공적 사안들에 대한 침례교 연합 위원회(Baptists Joint Committee on Public Affairs), 이슬람 교육협회(Council on Islamic Education),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NCC in the U. S. A), 미국 정통 유대교 회중연합(Union of Orthodox Jewish Congregation of America) 등등 19개 종교 및 교육 단체들이다.

26) 이 지침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관해 가르치는 것, 교사들의 개인적 신앙의 문제, 학생들의 종교적 표현 문제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18개 항목에 걸쳐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법 규정 및

이와 같이 미국의 종교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엄격한 구분 하에 전자에서는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을 전면 허용되고 있는 이원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계와 종교계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에서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의 표현과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과, 종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역사와 문학 등 일반 과목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별도의 종교에 대한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아마도 첫 번째 것이 종교계의 일차적 관심이라면 두 번째 것은 종교계와 교육계가 공통적으로 관심하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 것은 교육계 특히 종교학계에서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의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 미국 종교학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 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AAR)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지침, 교과서, 교사교육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왔다. 기본적으로 종교학 교육이 공교육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0년에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특별 전문위원회'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를 구성,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05년의 보고서에서는 교과서와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27]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종교에 대한 교육 혹은 종교학교육)이 정식으로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본다.

이제 일본의 종교교육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들(공립학교들)과 사립학교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과 종교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들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곧 종파적인 종교교육이 가능하다.[28] 그래서 종교교육이라는 말이 특정 종교

합의 성명 등에 의거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아마도 핵심적은 것은 4번째 조항인 "종교에 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이라고 보는데, 다음과 같은 6가지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① 종교에 대한 학교에서의 접근방법은 학문적이어야 하지 종교 헌신적이어서는 안 된다. ②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를 알게 하는데 주력해야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종교에 관한 연구를 지원해야지 종교의 실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교적 견해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특정 종교적 입장을 부과하려 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는 모든 종교에 관해 교육을 해야 하며, 종교를 증진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⑥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념에 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신념을 돈독하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27) AAR의 공식 홈페이지 www.aarweb.org 참조.

28) 일본의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자율화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로, 당시 분부성 훈령 제8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종교교육을 허용했다. ① 학생의 신교의 자류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할 것, ② 특정 종파나 교파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뜻을 학칙

들에서 설립한 학교들에서의 종교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초·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교(일본에서는 종파립[宗派立] 학교라고 함)는 전체 학교의 불과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교육 자체가 교육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는다.[29]

그런데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향후 일본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종전의 교육기본법 제9조의 ①항에서는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 및 종교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지위는 교육상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제15조)에서는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도 교육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추가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도 종교에 관한 교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일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文部科學事務次官)이 전국의 각급 학교장과 관련 위원회 및 단체들에 보낸 개정 교육기본법 시행 통지문에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대해 "종교교육에 대해서, 옛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종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을 교육상 존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한 것"[30]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 교과과목과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종교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고[31] 이러한 일반과목에서의 종교에 대한 내용도 종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인본주의적 이해만 강조되어 있고 종교라는 주제가 과소평가되거나 무관심하게 취급되고 있지만[32]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더불어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일반 과목들에서 보다 상세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으며, 별도의 종교관련 과목의 신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3]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

에 명시할 것, ③ 종교교육의 실시에서 학생의 심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앞의 글, 4쪽 참조.

29) 일본의 전체 학교 중 초등학교(소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은 0.7%, 중학교 6.2%로 의무교육에서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낮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24,1%로 다소 높은 편이나 종립학교는 전체의 2% 내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www.mext.go.jp) 참조. 일본의 사립학교에서는 도덕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3년 기준, 일본의 전체 학교 중 종교계 설립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학교 0.3%, 중학교 2.1%, 고등학교 6.5%, 단과대학 22.9%, 대학교 17.0%이며,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67.4%로 가장 많고, 불교계 26.9%, 신도계 1.3%, 신종교계 4.3%이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일본의 종교교육의 역사와 현상", 한·일 종교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동서대학교(2001. 2), 5쪽 참조.

30) "教育基本法の施行について (通知)" 제하의 문부과학 사무차관의 2006. 12. 22 자 통지문으로, 수신자는 各都道府縣·指定都市教育委員會, 各都道府縣知事, 各國公私立大學長, 各國公私立高等專門學校長, 各大學共同利用機關法人機構長, 各文部科學省施設等機關の長, 各文部科學省特別の機關の長, 各文部科學省獨立行政法人の長, 日本私立學校振興·共濟事業団理事長, 公立學校共濟組合理事長, 등이다.(www.mext.go.jp 참조).

31) 김세곤, "일본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pp.23-41 참조.

3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편,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112-113쪽.

본 국회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종교교육의 방향이 거론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

-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육에 대한 금지는 지켜져야 하지만, 종교가 지닌 휴머니즘, 생명에의 사랑, 타인에 대한 봉사의 이념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므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그에 대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 종교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전쟁 전의 일본과 같은 국가신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 종교적인 교양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상호 관용을 갖게 하는데도 중요하다.
- 국공립학교에서도 종교에 관한 개론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외 종교들에 대해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적절한 교재나 학습지도요령의 작성, 교사의 연수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종교정조(情操) 교육"이었다. 이것은 생명에의 외경과 같은 종교적 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특정의 종교를 유포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교육기본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는 두루 언급되어 있다.[35] 주로 도덕, 공민(公民), 윤리 등의 과목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교적 정조 교육은 여러 종교에서 중시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종교교육에서보다는 여타의 다른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일본의 사립학교들에서는 '종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담당 교사들이 '사회·종교' 혹은 '공민 · 종교' 교과의 교사자격증(면허)을 받을 수 있는데, 전공에 종교학과 종교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 전공을 통해 '사회·종교' 혹은 '공민·종교' 교과의 교사자격증(면허)

---

33) 일본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에서 코사카 문부 과학대신은 종교에 관한 일반적 교양에 대해서 종교의 역사와 특성, 분포, 역할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에 대하여 국제관계가 긴밀하고 복잡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민족의 배후에 있는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답변에서는, 행위의 목적이 특정 종교에 관한 종교적 의의가 있고, 그 결과가 종교에 대한 지원이나 배척을 하게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본다. 구체적인 예로서 승려나 신부, 목사 등이 국공립학교에 가서 비상근 강사로 교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 종교의 교의를 가르치거나 포교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국회 심의 중요 답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www.mext.go.jp) 교육기본법 자료실, 67-75쪽 참조.

34) 일본 중앙교육심의회(2003. 2.20)의 회의록 중 "종교관련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및 교육관계단체 청문회에서의 주요 의견 요약,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gijiroku/002/030202.htm 참조.

35)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 도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 도덕,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총칙, 공민 등에서 두루 강조되고 있다. 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의 전국 38개 대학[36]에 1종 면허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35개 대학원과정에 전수면허과정이, 그리고 3개 대학에 통신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종교 교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한 강습과 공개강좌가 거의 매년 특정 대학에 개설되는데, 대체로 종교계 사립대학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관련 강좌 과목들도 대부분 특정 종교에 관한 것들이다.[37] 따라서 일본의 종교 교사자격증은 주로 종교계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자격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일본의 종교교육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엄격한 구분 하에 전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전면 금지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주로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만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국공립학교들에서는 도덕과 공민 등의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종교적 정조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타의 과목에서도 종교에 관한 역사나 객관적 설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종교교육은 1946년에 제정, 시행된(1947. 5.3)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 법은 전후 제국주의 청산과 더불어 민주적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교의 분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강조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국가신도와 같은 종교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였고 논란이 되었던 종교적 정조교육도 이 법에서 포함되지 않았다.[38] 결국 일본의 공교육에서 모든 종교교육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바, 2006년의 교육기본법 개정에서 "종교에 관한 일반적 교양"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에 관한 교육의 길을 터놓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공교육에서 종교에 관한 일반적 교양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다룬 한·미·일 삼국의 종교교육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법률은 세 나라에서 모두 공교육에서의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금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교의 분리가 헌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국가에서 모두 공교육(국가 및 공공단체가 세운 학교에서의 교육)과 사교육(개인이

---

36) 국립대학으로는 東北대학, 東京대학, 京都대학 등 3개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종교계 사립대학들이다.

37) 예컨대 2006년 강습 및 공개강좌는 기독교대학인 上智대학에서 개설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유(教諭) 1종과 2종 자격 인정 강좌였고, 과목으로는 종교학(신약성서 개설, 사도언행록, 시편, 요한복음서), 종교사(기독교영성사, 기독교 교파 계보와 신학, 기독교사, 불교와 기독교), 교리학·철학(기독론, 기독교와 철학, 예언자의 신학, 종말론, 삼위일체론, 생명윤리) 등이었다.
www.mext.go.jp/a_menu/shotou/kyoin/010602.htm 참조.

38) 일본의 교육기본법 제정 과정과 일본 국회 및 교육쇄신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교육기본법 자료실"(www.mextgo.jp/b_menu/kihon/data/index.htm)의 "교육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자료"를 참조.

나 사적 단체에서 세운 학교에서의 교육)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적어도 중등교육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교육 비중은 낮은 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수에서 중학교 22.8%, 고등학교 44.5%나 되어 사실상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하는 것 차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재정지원이나 행정 관리 등의 면에서 한국의 사립학교는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중에서도 종교계 학교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공교육 체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는 전적으로 공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공교육 현장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의 금지 및 종교의 자유가 주된 논쟁 주제가 되어 왔고, 종교계와 교육계의 합의를 통해 일정한 종교교육의 지침을 만들거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공립학교들에서 사실상 모든 종교교육이 배제되어 있고, 국가신도에 의한 종교교육의 폐해의 경험 등으로 해서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다만 도덕과 윤리, 공민 등의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종교에 대한 역사와 현실이 언급되어 있고, '종교적 정조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종교교육의 논의는 주로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립학교들에서는 일반 과목들이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이 거론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종교교육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과목을 정규시간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 자체가 특정종교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종교교육 논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셋째로 공교육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종교학 교육 혹은 문화·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세 국가에서 공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계와 종교계가 공동으로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미국 종교학회에서도 교과서와 커리큘럼의 개발 및 교사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종교에 대한 일반적 교양"도 교육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구절을 첨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역사에서 종교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와 세계 여러 종교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국공립 학교교육에서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 과목을 종교학 교육 혹은 종교문화교육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 국가의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위상은 일천하다. 세 국가에서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각국 종교학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세 국가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현안 문제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의 종교 활동이다. 곧 공교육의 현장에서 종교자유의 보장 범위에 대한 것이 가장 첨예한 문제로 부가되어 있다.

예컨대 정부가 공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공적 재정을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사립학교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선택하고 일부 주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교행사나 수업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을 면제하여 주는 것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발적 종교 모임 등도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곧 공교육에서의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종교교육의 최대 현안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때부터 최근의 개정 때까지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줄곧 '종교적 정조교육'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종교적 심성에 대한 교육이 도덕적 혹은 정신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도 특정 종교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9]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일반 교과목에서의 종교관련 내용에 종교들 사이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된 문제는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위주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야기되었다.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편성된 특정 종교 위주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고, 특히 종교의식이나 행사에의 의무적 참여는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V. 결론: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에 대한 제언

한·미·일 삼국의 종교현황과 종교정책 및 종교교육의 현실을 비교해 볼 때, 다종교상황과 정교의 분리, 종교 신앙의 자유 보장, 공교육과 사교육의 분리, 공교육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의 금지, 교양을 넓히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인정 등 공통적인 면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모색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세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교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와 종교계 및 종교학계의 지속적인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한 교양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중시한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그것을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

39) '종교적 정조교육'의 강조는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932년 일본의 문부성 훈령 제12호에 대한 통첩에서 종교교육이 종교정조교육의 금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이루어졌고, 이어 1935년의 문부성 차관 통첩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1937년의 국민정신 총동원령 운동 이후 군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그러한 정조교육은 군국주의에 편입되고, 전후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아직까지 교육기본법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앞의 글, 3-4쪽 참조.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사회적 합의와 대법원의 판례를 근간으로 일정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못하고 뚜렷한 정책을 드러낼 정도의 판례도 없으며 종교법인법과 같은 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기 쉽다. 종교의 정치적 이용이나 그 역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자율적 합의를 중시하든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든지 간에 국가의 종교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소 금기시된 종교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소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별이 모호하다는데 있다고 본다.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 왜곡되거나 종교교육 자체를 무시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종교 위주의 종교교육을 하고자 하는 종교계 사립학교는 점차 완전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을 유도한다거나 종교에 대한 교육(종교학 교육 혹은 종교문화교육)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정 종교관련 교육은 방과 후 활동이나 별도의 수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종교학계는 종교에 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종교다원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류와 접촉이 확대되고 밀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현대인의 교양으로서나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교육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와 커리큘럼, 교육지침과 지도서 등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교육계와 종교계의 협조와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이해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과 종교에 관한 교육이 모두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점차 양자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종교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8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자를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으로, 후자를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으로 정식화 했으며,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그러한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교육(기독교 교육, 불교 교육 등)을 종교교육으로 지칭한다거나 그러한 특정종교의 교육들을 모두 합해 종교교육으로 통칭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13권, 종교교육학회, 2001.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집, 한국종교학회, 2002.

_____, 「한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종교교육학회, 1997.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_____,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14권 6호, 한국교육개발원, 1992.

_____, 「한국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학연구』 20권,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2001.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류성민,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1994.

박범석, 「교육종교학 성립의 필요성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1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서희정, 「종교교육의 의의와 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10집, 한국교육법학회, 1998.

실리 (J. Seale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강돈구·박진원 역, 『종교교육이론』, 서광사, 1992.

안병초,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가톨릭문화원, 1999.

염연철, 「미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교육법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0-2, 한국교육행정학회, 2002.

_____, 「미국의 종교관련 교육법제의 사회통합기능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11집, 1999.

유방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4.

윤이흠, 「종교 다원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집, 한국종교학회, 1986.

이진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신교의 이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중·고교 도덕교육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종교연구』 2집, 한국종교학회, 1986.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_____, 「종교교육의 실태-각급학교 종교교육 실태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6권, 1990.

_____,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41집, 대한민국 학술원, 2002.

_____, 「한국의 종교생활과 교육」, 『교육월보』, 교육부, 1993.

정현숙, 「종교교육의 연구영역」,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편, 『논문집』 8권, 경희대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1992.

조영관,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경향잡지』 3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Bayefsky, Anne F. & Waldman, Arieh, *State Support for Religious Education*, Brill Academic Public, 2006.

Brian, Gates, *Freedom and Authority in religions and Religious Education*, London: Cassell, 1996.

Burgess, Harold William, *An Invitation to Religious,*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6.

Cristopher, Winch & Hohn, Gingell, *Key Concept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1999.

Ian, MacMullen, "Education for Autonomy: The Role of Religious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38, 2004.

Jackson, Robert, *Rethinking Religious Education and Plurality*, London: Routledge, 2004.

Lynne, Broadbent & Alan, Brown, *Issues in religious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02.

Ratcliff, Donald & Neff, Blake J., *The Complete Guide to Religious Education Volunteers*,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3.

Wilkerson, Barbara,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7.

文化廳文化部宗務課 편, 『宗教年鑑』, 平成 15年版, 文化廳, 2004,

加藤西鄕, 「現代における宗教と教育の問題」, 『龍谷大學論文集』 427號, 1985.

加藤西鄕, 『宗教と教育』, 東京: 法藏館, 2000.

家塚高志他, 「宗教教育の理念」, 日本宗教學會 編, 『宗教教育の理論と實際』, 金鈴出版, 1985.

江原武一 編, 『世界の公教育と宗教』, 東京: 東信堂, 2003.

磯岡哲也, 「日本の宗教教育における宗教別比較」,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01.

杉原誠四郎, 大崎素史, 具塚茂樹, 『日本の宗教教育と宗教文化』, 文化書房博文社, 2004.

小山一乘, 「宗教教育·宗教科教育における宗教の教育考」, 『宗教研究』, 76-2(通卷 333), 日本宗教學會, 2002.

井上順孝, 『教育のなかの宗教』, 東京: 新書館, 1998.

_____, 『宗教教育資料集』, 東京: すずき出版, 1993.

_____, 『宗教と教育』, 東京: 弘文堂, 1997.

원고접수: 2008년 1월 26일 1차심사: 2월 3일 게재승인일: 2월 13일

연구자 소개: 류성민
① 전공: 종교학/ 소속: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종교학방법론과 이론, 종교교육이론, 종교교육학 방법론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간』, 『의례의 이해』(번역서),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
④ E-mail: sungmin@hs.ac.kr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Policy of Korea, the Unite States of America and Japan

Ryu, Sung-Min
Professor of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puts its purpose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policy of Korea,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Japan. And the basis of its analysis is the correlations of religious situation, religious policy and religious education. It is Protestantism, Catholicism and Buddhism that are main religions and have the initiative in religious policy, and take the main current effects in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ristianity is a predominant religion, and religious policy is putted its stress on the freedom of religion and the equity among denominations and sects of Christianity. And religious education of U. S. A. also is concerned with the prohibition of doing good or bad to a specific denomination or sect through constitution an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But the application of cases is limited to public schools. Shinto and Buddhism are representative religions in Japan, and their activities are carried out as juristic person. So the religious policy in Japan is adjusted the focus to a lot of religious juristic persons, and it is Law of religious corporation that take charge of and supervise them. Religious education for a particular religion is prohibited in public school in Japan.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with religious policy and religious education among three countries. They all emphasize the freedom of religion,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and the strictly prohibition of religious education for or against a specific religion or denomination in public schools.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ir policies and educations with religions according to religious situations of three countries. It is a dim sepa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at is became a most critical problem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In U.S.A., the critical issues are concentrated into the limit and range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The necessit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is current criticism in Japan. Such are the reasonsof differences in religious policy.

However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ducation about religions are acknowledged and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sure for solving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in three countries.

Key words :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policy, religious situations, comparative study